

# 민생 없는 민생 담론

## 한국 종합일간지 사설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이정민** 부경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이상기**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연구는 첫째, 현대 한국사회의 신문사에 의해 발화되는 '민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것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했다. 둘째, 신문사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대담론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주요 종합일간지의 표제어에 '민생'이란 키워드를 담고 있는 사설들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민생담론은 누적적으로 형성된 담론 관행이 시간의 흐름과 사회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정부별로 담론이 형성되고 전환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생을 대변한다는 암묵적인 전제하에, 정부·정치권과 저항세력에 대해 적대적이나 공격적인 진술을 정당화했다. 또한 민생담론은 한국의 민주화·세계화 과정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과 관계했고, 민주화의 발전과정과 함께 비판의 주된 대상이 정부중심에서 정당중심으로 변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민생담론이 노동쟁의, 물가, 통화증가율, 주택문제, 외환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환란이후인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문제부터 양극화 문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등의 문제들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사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생경제 담론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비판을 가했지만, 위기를 벗어나려는 대안의 모색이나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요종합일간지 신문사설에 의해서 생산되는 '민생'이란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 정의로서의 '국민생활' 그 자체와 거리가 있었다.

**KEYWORDS** 민생, 민생담론, 민생정치, 민생경제, 비판적 담론 분석, 민생 없는 민생 담론, 기억자원.

\* miniyo55@nate.com

\*\* lsngk@pknu.ac.kr, 교신저자

## 1. 서론 및 연구문제

선거기간이 되면 ‘민생투어(民生tour)’라는 명목으로 정치인이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찾아 다니며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대중매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들은 저마다 국민의 안녕(well)과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민생우선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그들이 강조했던 말의 실천에 대해서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는 듯하다. 정치인의 행위는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정치행위의 실천에 대해서 대중매체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대중매체는 정치인에게 있어 ‘양날의 칼’인 셈이다. 그렇다면 대중매체는 국민들을 향해 정치인들의 발화를 대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역설적으로 ‘대중매체가 정부·정치권의 감시기능으로서 민생을 대변하는 것인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해서, 대중매체에서 ‘민생’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민생(民生: livelihoods of the people)’은 통치권과 함께 존재해 왔던 오랜 역사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민생’은 소위 말하는 왕권 아래서의 백성들 생계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민생’은 사전적으로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를 의미한다. 생계(livelihoods)는 곧 먹고 사는 일이다. 이는 삶의 본질이므로 중요한 일에 틀림없다. 그런데 그런 함의를 담고 있는 민생이란 용어가, 한국의 대중매체에서는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를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 주로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정치인들의 정쟁을 비판하거나, 민생현안이나 법안 통과에 관해 책망하고, 촉구하며, 마무리 하는 식이다.

대중매체에서 다루는 민생에 관한 정보도 결국 언어인 말과 글(text)로 남겨지게 되고, 그것이 모여서 주제를 가진 담론이 형성되게 된다. 또한 하위 주제를 가진 담론들의 합은 거대담론을 형성하고 나아가서 지배담론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 그렇게 형성된 담론들은 특정 시기에 일정한 관행으로 되풀이되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의 정치적 정세를 대면할 때, 그것은 언제나 특정한 담론들이 ‘먹혀들고’ 있는 정세로 나타난다. 것처럼 ‘먹혀들고 있는’ 담론은 그 속에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결코 의문이나 반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이종영, 2003).

신문은 담론 분석에 용이한 매체이다. 매체 특성상 반복적으로 재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신문에서는 특정한 의제와 함께 담론이 반복적으로 재생산 된다. 신문은 사설이나 칼럼 등을 통해 정파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도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담론형성의 과정이며 요소일 것이다. 본 연구는 가능한 한 주요 종합일간지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최근 신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좁은 의미의 비교사회학(comparative sociology)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와 진보 언론으로 대표되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대한 대립구도 위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백선기, 1997; 한동섭, 2000; 정재철, 2002; 강진숙, 2006; 유용민·김성해, 2007; 김효진, 2008). 이것은 결국, 순수한 학문적 실천들마저 정치적 대립의 재생산을 공고히 하는데 일정부분 가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론의 보수와 진보 성향을 떠나 각 신문사 사설이 생산하는 민생담론을 가능한 폭넓은 사회적 관계에서 조망해보고자 한다.

신문사설에서 다루어지는 민생담론들 즉, 민생을 주제로 한 사설들은 주로 외연과 하위주제들이 가시적인 텍스트 구조로 존재한다. 이는 담론 역시 구조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텍스트의 구조는 동시에 그 시대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사회가 변한다면 담론 역시 변하게 되는 동인이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현 시점에서 대중매체에서 생산되는 민생담론의 사회적인 실천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주목 해보고 당대 텍스트를 사회적인 연관성 속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요컨대 대중매체에서 민생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민생담론의 실천에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변한 것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민(民)의 어원과 유래를 고찰한 장현근(2009)의 연구에 따르면 민(民)의 개념은 붙잡혀 눈이 찢린 채 이주해 와서 노동에 종사하는 노예들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신분변동을 거치며 결국 피통치자를 지칭하는 말로 의미 신장을 하였다고 한다. 나중에는 국왕 한 사람을 제외하고 정치사회의 모든 구성원까지 지칭하게 되었으며 최고통치자까지를 포함하는 국민개념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민(民)은 결국 피통치자 전체를 대변하는 글자가 되었고 나라의 근본이었으며 자유롭고 재산권을 가진 존재를 대표했다.

민생은 나라의 구성원인 민(民)의 생활이다. 민생에 대한 한국의 문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옛 한국의 통치이념과 동양 경세가(經世家)의 실천과 미덕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 일찍이, 민생을 위한 학문에 뜻을 둔 다산 정약용은 이상적인 민(民)의 근본 확립이 균전(均田)에 있지만 인습과 비리로 뒤엎혀진 실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국의 토지 지배권을 '왕권'으로 귀일시켜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송재소·이봉규·김태영·안병직·조성을, 2012). 이러한 경세의 학문은 민주주의의 본원과 상충한다. 오늘날의 민생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편, 서구 문헌에서의 민생(livelihoods of the people)은 주로 제 3세계의 약자, 빈민·난민의 생계, 혹은 촌락에서의 생활개선(Chambers, R. 1991, 1995, 1997; Rakodi, C. & Lloyd-Jones, T. 2002)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비록 언어에 의한 기의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특정한 지역이나 테마를 주제로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차이를 보인다.

민생을 표방하는 대중매체의 발화행위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선행연구는 현시점에서 전무하다.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로 정치색을 띠는 단체의 출판물이나 정당기관지의 대국민 담론 위주다. 아주 소수지만 ‘민생범죄’, ‘민생경제’와 관련한 법제들을 정도(正導)하려는 법학적인 시도들은 있었다(이천현·김지영·임정호, 2008). 또 진보라는 전제하에 민족경제론의 관점에서 민생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연구도 있었다(류동민, 2007).

현대사회에서 민생이란 개념은 우리의 생활에 스며들어 정착된 듯하다. 달리 말해서 민생활, 시민생활, 국민생활 등을 아우르는 용어인 민생은 언제부터인가 정치인에게 가장 으뜸이 되는 의무로 표방되어 왔고, 대중매체 역시 민생담론의 시혜자와 수혜자를 구별하면서 민생의 담지자(擔持者) 역할을 해왔다. 정치인과 언론 양자는 각각 민생담론의 생산 주체가 된다. 대중매체의 담론은 민생을 등한시하는 정치인의 의정행위를 비판하면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민생우선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의 입장과 그들의 행태에만 초점을 두고 보도함으로써 정작 '민생 없는 민생'이 재생산 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민생의 다양한 의미가 언론에 의해 접합되는 파생어휘(derivational word)를 통해 분석해보면 주요한 함의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또한 연구자들은 담론의 금지, 분할, 배제의 과정이 권력과 특정한 시기의 에피스테메(Episteme)를 형성한다는 푸코(Foucault, 1971/2001)의 의견을 그 기저에 깔고 있다.

푸코와 그의 뒤를 이은 각종 논의들에서 담론의 방법론적 연구도 같이 진행 되었다. 담론의 분석방법은 많은 갈래가 있지만 연구자들은 최근에 문화연구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비판적 담론분석(Bell & Garrett, 1998)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기호학과 주류 언어학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사회·문화를 설명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이 접근법에서 분명하게 부각되는 것은 텍스트 그리고 담론과 사회의 상호작용(interactivity)이다. 한국 역시 1990년대 들어 비판적 담론분석의 방법론적 논의가 이어져 오면서(이성만, 2005; 이기형, 2006; 박해광, 2007; 신진욱, 2011) 사회·문화 그리고 매체 연구에서 성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이론과 방법론적 틀 내에서 연구자들은 민생담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추출했다.

- ① 주요 종합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민생담론의 텍스트 실천은 어떠한가?
- ② 주요 종합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민생담론의 정치학적 관계와 변화는 어떠한가?
- ③ 주요 종합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민생담론의 경제학적 관계와 변화는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 CDA)은 영국과 호주의 선구적인 비판언어 학자들과 담론분석가인 페어클러프 및 텍스트 언어학자인 반다이크의 접근법 등이 융합되어 만들어진 산물을 의미한다(Bell & Garrett, 1998). 언어는 경우에 따라서 이념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고, 사회적 과정(process) 및 문제(issues)들에 대해 언어학·기호학적(semiotic)측면으로 행하는 담론분석의 한 분야로서, “텍스트 자체의 분석, 텍스트의 생산, 소비 그리고 분배과정의 분석, 담론 사례의 사회·문화적 분석을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Fairclough, 1995/2004). 또한 이 접근법은 권력관계(power relation)와 담론이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지배관계의 생성과 도전에서 담론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심을 둔다. 이 접근법이 지향하는 또 다른 관심사는 사회유지 및 변화와, 담론의 관행 및 그 구조가 어떻게 상호 재귀적(reflexive)으로 반영하거나 반영되고 있는가를 변증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비판적이라 함은 언어·권력·이념 사이의 연결모습 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Fairclough, 1989; 2001). 즉,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 되는 관행과 통용되는 어휘 등을 재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담론에서는 주체가 설정하기도 하고 설정되기도 하는 능동적인 측면과 피동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 하고 있다. 사회구조는 담론을 결정해 줄 뿐만 아니라 담론의 생산물이 된다. 담론역시 생산자가 선행한 이데올로기의 해석이다. 그러므로 비판적 담론분석은 이데올로기에 내재한 신문사의 자의성을 인정한다. 또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연구에서 완전하게 한편의 입장만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박한다(Fairclough, 1995; 1989; 2001).<sup>1)</sup>

1) 페어클러프의 담론분석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접근법을 ‘비판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반적인 사회적 관행과 우리가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인과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Bourdieu, 1977; Fairclough, 1995, 재인용). 둘째, 언어는 사회의 다른 단면들과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역사적으로 위치해 있는 행위방식이다. 즉 언어는 사회적으로 구성되지만 또한 사회적으로 구성한다. 셋째, 각각의 담론 유형은 특정한 일련의 주체 지위들 속에서 운용하는 사람들이 해당 주체 지위를 점유하도록 제약되어 있다. 넷째, 언어 사용 또는 모든 텍스트는 동시에 표현,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다섯째, 텍스트분석은 전통적인 형태의 언어학적 분석, 즉 어휘 분석과 의미론, 문장 및 좀 더 작은 단위들의 문법, 소리체계 그리고 글자체 등을 망라한다. 또한 문장이상의 텍스트 조직에 대한 분석도 포함한다. 이 분석은 텍스트의 존재뿐만 아니라 부재(absence), 즉 텍스트에서 발견되지 않는 표현, 참여자 범주, 참여자 정체성이나 참여자 관계의 형성 등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여섯째, 담론관행은 매체텍스트 생산 및 소비과정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 한다.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좁은 의미에서 담론 과정인데 반해, 어떤 것들은 좀 더 제도적인 특성을 띤다. 일곱째, 창조적인 담론관행은 형태와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텍스트에서 실현되는 반면, 관습화된 담론관행은 형태와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텍스트에서 실현된다. 여덟째, 사회·문화적 관행은

신문은 과거의 자료들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기 용이하며 그것과 관련한 사회의 흐름을 맥락 속에서, 혹은 특정한 시기의 맥락 구조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페어클러프(2011)는 언어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정태적인 체계로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한 소쉬르의 핵심적인 주장을 비판하면서, 담론에 관한 통시적인 접근을 옹호했다. 이러한 페어클러프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부별 매체담론과 사회적 관계들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텍스트 실천에서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담론의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주요 종합일간지<sup>2)</sup>에서 제목에 '민생'이란 단어를 포함하는 신문 사설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사설은 개별 신문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 자사의 입장을 강조하는 행위로서 신문사의 이념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나 담론으로 표출된다. 분석기간의 주요 범위는 문민정부 이후로 설정했다. 그러나 군사정권이후 사회적으로 과도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료의 수집은 노태우 정부도 포함시켰다. 즉, 1988년 2월 25일부터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난 201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했다.

자료의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구축하고 있는 기사통합검색 서비스(KINDS)를 이용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KINDS에서 검색이 불가능하므로 자사의 홈페이지 검색서비스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수집했다. 1990년대 이전의 자료들은 대부분의 신문들이 전자문서화 되지 않아서 키워드 검색이 불가능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KINDS의 '90년대 이전 신문'에서 스캔되어 저장된 PDF 자료들을 찾아 수집했다. 중앙, 조선, 세계일보는 자사의 PDF 서비스를 이용했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는 온라인포털 네이버의 '뉴스라이브러리'에서 검색했다. 국민일보는 국회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존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했다.<sup>3)</sup> 수집한 자료에서 '북한의 민생'과 같이 본고의 연구주제와 관련 없다고 판단한 사설들을 제외한 분석대상의 사례는 총 455건이며 신문매체별로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제목(headline)은 리드(lead)와 함께 전략적으로 본문의 요약형태를 띠고 있다. 요컨대 담론의 상황을 정의한다(van Dijk, 1988). '민생'이란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제목의 표제어는 한눈에 보일만큼 뚜렷한 양태를 띠고 있었다. 수집한 자료의 제목에 나타난 민생담

실제 특정한 사례들을 모든 단계에서 누적적으로 재형성한다.

2)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경향신문, 세계일보, 문화일보다.

3) 국민일보는 내부 사정으로 2002년 이전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표 1. 주요 종합일간지 사설의 민생담론 빈도

신문사	빈도	백분율
조선일보	24	5.3%
중앙일보	19	4.2%
동아일보	74	16.3%
한국일보	37	8.1%
국민일보	57	12.5%
한겨레신문	31	6.8%
서울신문	75	16.5%
경향신문	47	10.3%
세계일보	74	16.3%
문화일보	17	3.7%
합계	455	100%

론의 하위 주제는 대부분 네 글자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명시된 표제어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그렇지 아닐 경우는 리드에서 언급하는 핵심적인 주제어를 근거로 연구자들이 분류한 9개의 항목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쪽으로,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했다.

① ‘민생치안’은 주로 범죄, 시위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에 위협이 가해지는 것이다. ② ‘민생경제’는 세계화, 신자유화, 물가, 부동산, 금융문제, 경제성장, 분배 등에 관한 것이다. ③ ‘민생현안’은 국회에 상정되는 국민생활에 관계한 법안 등을 통칭한다. ④ ‘민생우선’은 정부·정치권에 대해 민생문제의 우선을 촉구하는 담론전반이다. ⑤ ‘민생국정’은 정부의 민생사정, 대통령의 기조연설, 정책의 다짐 등 국정전반에 관한 담론을 의미한다. ⑥ ‘민생의정’은 의회정치 체제에서 정치인들의 국회활동 행위를 말한다. ⑦ ‘민생외면’은 정부·정치권이 정쟁과 당리당략 등을 이유로 민생문제를 등한시 한다는 내용이다. ⑧ ‘민생투어’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이 재래시장, 노인정 등을 돌며 일반 국민의 생활 여건을 직접 알아보는 행위이다. 분석자료에서 나머지 ‘민생사범’, ‘수재와 민생’, ‘민생사면’과 같이 사례가 극히 적고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주제어는 ⑨ ‘기타’로 분류했다.

이를 개념적 층위로 분류하면 민생담론의 많은 주제는 ‘민생치안’, ‘민생경제’, ‘민생현안’, ‘민생우선’, ‘민생국정’, ‘민생의정’인 중분류로 범주화 할 수 있고, 이들은 민생문제, 정치행위, 그리고 신문사의 비판이 담긴 요구인 대분류로 묶을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민생담론의 주제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민생문제	민생치안	민생안전 민생사범 민생위협
	민생경제	민생물가
	민생현안	민생안건 민생입법 민생법안 민생대책
민생요구	민생우선	민생으뜸 민생전념 민생주력 민생위주 민생중시 민생전념 민생불만 민생회복 민생해결 민생 살리기
정치행위	민생국정 (행정)	민생안정 민생개혁 민생사정(査正)
	민생의정	민생체제 민생정국 민생국회 민생정당 민생회담 민생협력 민생합의 민생국감 민생대책회의
	민생외면	민생뒷전 민생실패 민생표류 민생따로 민생실증
	민생투어	민생행보 민생탐방 민생현장



### 3. 민생담론의 비판적 분석

#### 1) 민생담론의 텍스트 실천: 표현, 구조

“담론의 분석은 우선 그 단위인 텍스트의 언어와 ‘짜임새(texture)’에 대해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은, 음성적, 어휘적, 문법적, 그리고 거시구조적/도식적 차원을 포함하여 많은 차원에서의 분석을 포함한다(Fairclough, 1995/2004, pp. 50~51).” 텍스트 실천-담론실천-사회적 실천은 위계적으로 연결된다(Fairclough, 1995). 따라서 이 절은 앞으로 논의 될 사회적 실천과 위계적 연관성을 가진다. 자료수집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표제어에 드러난 합성어이다.<sup>4)</sup>

- ① 민생치안 이래서야 (국민일보, 1988.12.28)
- ② 민생물가 확실히 잡아야 (경향신문, 2002.08.27)
- ③ ‘민생 전담’ 또 빈말이어선 안 된다 (동아일보, 2004.08.24)
- ④ ‘민생 안정’ 실천 뒤따라야 (한겨레신문, 2002.01.17)
- ⑤ ‘민생국회’ 되도록 (국민일보, 1998.05.02)
- ⑥ 민생 표류 방지할 것인가 (경향신문, 2003.11.12)
- ⑦ 이런 ‘민생투어’ 할 때인가 (한국일보, 2000.08.11)

위 ①~⑦의 표제어들은 주격조사가 없는 명사적인 용법으로서 주체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진술이 없음에도, 관계적인 가정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주체들이 생략되어 있어도 우리는 무엇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의식적인 추론과정 없이도 해석이 가능하다. 밑줄 친 합성어에서 ‘민생’이 포함됨으로 이를 단서로 주체와 대상의 교량적인 연결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제목에서 민생을 제거하면, 텍스트로 표현되는 국민과 정부·정치권에 대한 담론의 내적관계부터 단절된다. 페어클러프는 이러한 비의식적인 해석을 두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텍스트를 산출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이끌어내는 기억자원<sup>5)</sup>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였다. 텍스트의 형식적 속성들은 담론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 산출과정에 대한 흔적으로 간주될 수 있고 해석과정의 단서

4)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례들은 기사원문의 띄어쓰기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다.

5) ‘구성원들의 기억자원(members` resources)’ - 장기 기억 속에 저장해 놓은 표상의 원형(낱말의 모습, 문장의 문법형태, 서사이야기의 전형적 구조, 대상과 사람들의 유형에 대한 속성, 특정한 상황유형 속에서 사건들의 기대된 연결체 등)을 말한다(Fairclough, 2001).

들로 간주될 수 있다. 결국 해석과 생산은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된다. 즉, 사람들이 이끌어 내는 기억자원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다는 의미에서 인지적이지만, 사회적 기원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이라는 것이다(Fairclough, 1989; 2001). 담론에서 이런 기억자원의 형성은 장기적인 언어의 맥락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시기의 담론에서, 각 신문이 지향하는 바에 의해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담론실천의 결과이다. 이는 곧 담론생산자의 설정에 의한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로 이데올로기적인 지위가 안전해지며 재생산이 용이한 것이다. 또한 각 신문사간의 가치판단은 상이해도 특정한 시기에 같은 주제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신문사간의 모니터를 통한 비판기제의 맥락화(contextualization)로 인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 ①~⑥의 사례에서는 부정과 긍정에 대한 어휘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해보았다. 민생담론은 민생정책과 정치권의 활동에 대한 긍정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본용언으로 완결되는 ‘옳다’ 같은 완전한 긍정보다는 어근이 중의적인 단어로서 ‘평가’, ‘의미’, ‘이례’, ‘관심’ 등과 함께 보조용언을 사용한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자주 사용되어진 어휘로는 용언에서 보조형용사, 보조동사, 서술성 의존명사를 사용한, ‘평가할 만하다’,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등이다. 또한 문맥에 비추어 해석할 때 긍정을 함의하고 있지만 모호하게 흐리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어휘들은 접미사와 보조용언을 사용하여, ‘다행스럽다’, ‘다행스런 일이다’, ‘다행스런 처사라 할 것이다’ 등이다.

①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 더는 차질 없게 (동아일보, 2004.12.22)

그동안 국회가 헛돈 이유는 분명하다.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4대 법안’ 때문이다. 이들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하느라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방치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들 법안을 다루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② 아직도 민생대책회의인가 (중앙일보, 2002.01.17)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금을 인상하며, 청소년 실업 해소를 위해 1분기 중에 관련 예산의 40%를 조기 집행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런 대책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뚜렷이 악화되거나 새로 부각된 문제들을 추려 현실적인 대응 방안들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

③ 민생법안 자유투표 폭 넓혀야(서울신문, 2003.08.01)

여야가 어제 의원들의 자유투표 방식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법을 통과시킨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입법 내용 자체도 그러하거나와 당론을 결정하기 어려운 현안에 대해 의원 개개인의 양식과 판단에 기초해 처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하겠다.

④ 민생을 앞세우는 후보의 자세 (서울신문, 1992.05.30)

대통령선거운동을 일정기간 유예시키기 위해 여야대통령후보회담을 갖자는 김영삼 민자당후보의 28일 제안은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⑤ 선 민생법안 후 교섭단체 (중앙일보, 2000.07.28)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로 꼬인 정국이 큰 가닥에서 풀려가는 모습이어서 다행스럽다.

⑥ 민생회담, 합의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세계일보, 2007.02.10)

참여정부 4년간 청와대와 여야가 정파 이익과 당리당략만 앞세운 정쟁에 골몰하는 사이에 국정이 표류하면서 국민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민의 정치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민생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러한 어휘는 긍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흐리고, 그동안의 맥락으로 배경화(backgrounding)된 정계의 무능을 같이 이끌어 내어 독자로 하여금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우리사회에서 통용되는 긍정의 의미지만, 이는 분명히 어정쩡하고 인색한 긍정이다. 반면에 아래 ①~③의 부정적 진술의 어휘들은 미래에 대한 우려 즉, 일어날 수 있는 일 조차도 단호하고 단정적인 진술을 보이고 있다. ‘~스럽다’, ‘~만하다’ 등의 보조용언이 포함된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정치국판에 쏟는 힘을 민생에 돌려라 (한국일보, 2006.12.-04)

여기에 내년 2월부터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일제히 오르고, 시중 금리인상 추세에 따라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② 민생경제가 급하다 (국민일보, 1991.05.13)

민약의 경우 올해에 또다시 지난 89년과 같은 험악한 노사사태가 재연된다면 우리 경제는 파국을 면하기 힘들다.

③ ‘시국’은 있고 ‘민생’은 없는 치안 (한겨레신문, 1990.02.11)

공룡여당에 반대하는 학생·노동자·농민의 거센 저항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오는 봄에 경찰력이 그쪽으로 더 쏠리면 민생치안이 지금보다도 소홀해질 것이 걱정이다.

민생담론은 민생 문제의 설정(정부·정치권의 평가와 질책), 제시, 기대, 촉구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페어클러프(1995)이 언급한 ‘장르의 도식적 관점(schematic view)’<sup>6)</sup>의 틀에 대입하면 제목+도입부분(문제, 사건)+위성(정부·정치권의 평가와 질책)+요약(요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 ①~③은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의 사례이다. 민생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민생담론은, 치안·경제문제 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주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에 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민생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이다.

① 민생치안... 실행을 보고 싶다. (한국일보, 1990.01.12)

좀도둑은 좀체 명함도 내밀기 어려운 난세가 되었다. 범죄의 흉포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폐강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살인 마약 등 끔찍한 강력사건이 싹틈조차 없이 벌어진다. ... 정부가 민생치안을 바로잡겠다고 철석같은 공약을 한 게 어디 한 두번인가 ... 범죄와의 투쟁은 한계를 그을 수 없다. 칼을 뽑았으면 끊임없이 추적하여 없애버린다는 가시적 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다. 민생치안이 더이상 속수무책일 수는 없는 일이다.

② 물가와 민생, 경제 (국민일보, 1993.10.02)

서민 주부들의 잔주름이 늘어간다. 물가가 뿔박질하고 있어서다. 시장 가기가 겁난다고 한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다. 이를 피부로 느껴야 하는 주부들의 고통은 이만 저만

6) 장르에서 여러 단계로 구성된 도식구조(schematic structure)는 의무적이거나 선택적인 것으로써 완전히 고정되거나 부분적으로 고정된 순서로 존재한다. 가령 도입부분은 기사 전체의 요지를 요약하며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위성단락들은 독립적이며 순서를 재배열 할 수도 있다(Fairclough, 1995/2004).

이 아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신경제에서는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 강하게 물가안정을 역설해왔다. 하지만 이 약속은 갈수록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신 주부들의 원성이 높아 간다. 정부는 이 순간에도 연말 억제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야 얼마나 좋은 일인가 ... 물가를 잡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다.

③ 政爭에 발목잡힌 민생현안 (서울신문, 1999.08.11)

우리 경제는 지금 재벌개혁 부진으로 금융불안이 우려되는 등 각 부문에서 위기를 예고하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중산·서민층은 소득 감소와 상대적 빈곤감으로 심한 좌절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초래한 수재(水災)까지 겹친 실정이라서 민생현안의 처리가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총리 직무와 아무런 관련 없는 내각제 유보문제를 새로이 정치쟁점화, 정국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해 전혀 책임의식이 없는 '정쟁지향 일변도'의 소아병적 정치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은 물론 다른 주요 민생법안들도 시기를 늦춤 없이 챙김으로써 책임있는 야당의 자세를 보이길 거듭 당부한다.

④~⑥은 행위에 대한 비판의 사례이다. 행위의 관점에서 보면 민생담론은 정부 혹은 정치권 또는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한 행위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④ '선거최면'에서 민생정치로 (중앙일보, 1998.07.23)

여든 아든 재. 보선 결과를 과장되게 해석해 스스로를 충동해서는 안된다.

여당이 분을 못참고 여소야대를 강압적으로 바꾸려 또 가속기를 밟거나, 야당이 승리라고 자만해 정권의 개혁진로에 잘못된 브레이크를 걸거나 해서는 안될 것이다. ... 여야는 입만 열면 정치개혁을 외치면서도 손과 발로는 아예 개혁의 싹을 몽개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

뇌사(腦死) 국회를 내버려두고 선거판으로 달려갔던 정치권의 뻔뻔스러움에 유권자들은 분노했으며 이는 60%의 투표포기라는 충격으로 나타난 것이다. ... 여야는 이제 선거최면(催眠)에서 깨어나 차분한 마음으로 민생정치에 다가서야 한다.

⑤ 민생이 政爭 다음인가 (서울신문, 1999.08.10)

국회를 열어 놓고도 정작 정쟁(政爭)에만 몰두하는 여의도 '정치 풍토병'은 언제나 고쳐질 것인가. 제206회 임시국회 역시 여야의 그같은 고질을 또 다시 드러내주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13일로 회기가 끝나게 되어 있지만 정작 시급한 수재(水災)복구대책이나 민생관련법안 등의 심의는 별 진전없이 표류하는 양상이다. ... 이렇게되면 당연히 민생현안은 뒤로 밀리게 되어 있다. '위'에서 정치현안이라는 총론에만 매달리니 소속 의원들은 '각론'에 정성을 쏟을리 없다. ... 여야간의 정치적 대치나 대립이 없으 순 없겠다. 하지만 민생을 보살피고 수재민(水災民)의 고통을 덜어주는 커녕 정쟁만 일삼는 정치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⑥ 이런 '민생투어' 할때인가 (한국일보, 2000.08.11)

정치인들은 탄나라 사람인가. 의료대란·현대사태 등으로 나라가 곧 숨 넘어갈듯 긴박한 상황인데도, 정당 대표들은 한가롭게 '민생투어'를 하고 있고, 여당은 최고위원 경선에 앞서 돈선거 파문을 일으키는가 하면, 야당은 야당대로 정쟁거리를 만들어 내느라 여념이 없다. ... 시국이 어려울때 그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 서야 한다. 그러나 의사들이 또다시 전면 파업에 나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국회는 오블관언이다. ... 정치의 본령은 제반분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 정치권이 하루빨리 본령을 찾도록,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각성해 주기를 바란다.

위의 사례들은 주제를 포함한 도입과,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위성단락이, 결국 문제와 행위가 번갈아가며 요약인 결론에 이르는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장르적 도식관점'에 도입과 위성단락의 배열이 바뀌어도 결국 정부·정치권의 질책과 민생정책 개선에 대한 함의가 담긴 요구로 귀결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사례들은 주제어에 대한 상술(詳述)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추정하고 단언하는 위성단락에 의해서 혼탁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언론사가 민생을 매개로 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데 치중한 결과로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민생담론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민생문제가 정치적인 비판의 기제로만 부각됨에 따라 '본질적인 민생문제'가 등한시 되어 오고 있다.

7) 민생문제는 물가, 노동, 빈곤, 교육, 여성, 가족, 노인문제 등을 함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민생담론이 주제로 삼고 있는 민생문제는 민생치안, 민생경제, 외에는 민생사안으로 포괄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 민생담론에서

## 2) 민생담론의 사회적 실천

### (1) 민생정치 담론

사회적 실천 분석은 텍스트와 담론의 위계적 구조의 상위심급으로써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회를 설명한다. 민생담론은 한국의 민주화·세계화 과정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과 결부되었다. 6·29선언이 나온 직후부터 시민사회 내에서 갖가지 요구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이 선언으로 권위적인 국가의 역할이 완화되자 그동안 억눌렸던 온갖 사회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요컨대 과거청산, 개헌이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있었던 노태우 정부 시기에 노동자, 농민 등 각종 기층집단이 기존의 성장위주 정책에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권리와 몫을 주장하는 분배 갈등이 이 시기 갈등의 주된 양상이었다(조현연, 2006; 김일영, 2009). 그런데 이 시기의 민생담론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① ‘시국’은 있고 ‘민생’은 없는 치안 (한겨레신문, 1990.02.11)

경찰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거리마다 대형버스가 서 있고 그 안에는 많은 전경들이 있다. 노동쟁의 현장에서 112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재빨리 출동하여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다. 민생치안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시국치안만 서술이 퍼런 이 현실은 누구 때문에 빚어졌는가? 단순하게 경찰만을 탓할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

위의 사례는 민주화 이후, 과열된 양상을 보이던 노동운동과 개헌과정, 과거청산을 촉구하는 시위대와 공권력의 갈등 등에 의해서 시국경찰에 인력을 빼앗기게 되므로 경찰력의 분리가 불가피했고 치안행정의 소홀함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치안은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림 또는 그런 상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시기의 치안이란 강도, 강간, 인신매매, 조직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초중반 한국 신문의 민생담론은 이른바 민생안정의 중심이 치안에 있었다. 신문은 국민들에게 제반 치안문제 중에서 범죄의 증가가 특별히 심각함을 알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했다. 담론의 재생산은 사회와 상호관계를 가진다. 그런 점에서 담론은 여론을 형성하고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은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다.

---

‘실제 국민의 생활’의 구체적인 면은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민생문제 중에 민생치안이라는 이름하에 범죄사건과 시국혼란을 문제 삼는 민생담론의 주제는 최초의 문민 정부인 김영삼 정부 시기에다 다르지 않았다. 반면 김대중 정부에 와서 민생치안이란 주제의 빈도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범죄가 줄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총 범죄발생건수에 따르면 인구의 증가와 같은 통계학적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범죄발생은 전반적으로 크게 줄지 않았다(경찰청 통계, ID: TX\_132\_2009\_H1001). 이것은 분석기간 내에서 늘 발생했던 범죄로서, 담론의 생산관행과 실재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님을 의미한다. 게다가 오늘날 민생담론에서 강력범죄사건과 민생치안을 잘 결부시키지 않는 것은 그러한 맥락이 변했음을 의미한다. 민생담론의 문제설정에 본질적인 용법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문사 이데올로기의 지형이 변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민생문제를 두고 정부와 국회의 불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시기는 없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여전한 불신과 함께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한 요구 담론이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특이한 점은 대상의 변화이다. 즉, 치안사건에 대한 정부와 정책의 불신으로부터 국회와 정당의 의정행위에 초점이 옮겨졌다. 정책에 대한 불신을 피력하고 요구하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그 빈도가 증가 했으며 정책의 비판에서 정당의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동시에 식물국회, 날치기법안 통과, 개판정치, 개판국회, 저질정치, 당리당략 등의 어휘를 많이 사용했다.

① 민생 외면하는 ‘식물국회’ (경향신문, 1998.06.27)

야당인 한나라당이 또다시 소집한 임시국회가 문만 열어 놓은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들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왜 계속 국회를 소집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또 집권당인 국민회의나 자민련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이유도 잘 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당리당략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국회를 그들의 놀이터쯤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다음에야 이럴 수는 없다.

② ‘민생국회’ 조속히 다시 열어라 (경향신문, 2000.07.27)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한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강행 통과 시도는 결국 임시국회만 파행으로 몰고갔을 뿐이다. ... “16대 국회에선 절대 없을 것”이라던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 것 자체가 문제지만 운영위에서만 통과시켜놓고 결국 손을 들고 만 여당의 모습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능하다.



## ③ 국회파행에 방치된 민생현안 (문화일보, 2000.07.20)

그러나 여당이 야당의 국조권 발동주장을 끝까지 거부해 국회파행이 계속되도록 방치하는 것 역시 책임있는 자세가 결코 아니다. ... 여당지도부는 낚의 얘기하듯이 ‘개판국회’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자민련과의 연대만을 의식해 ‘힘의 논리’로만 밀어붙이려 해서 안된다. 시급한 민생현안들이 방치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정치력 발휘를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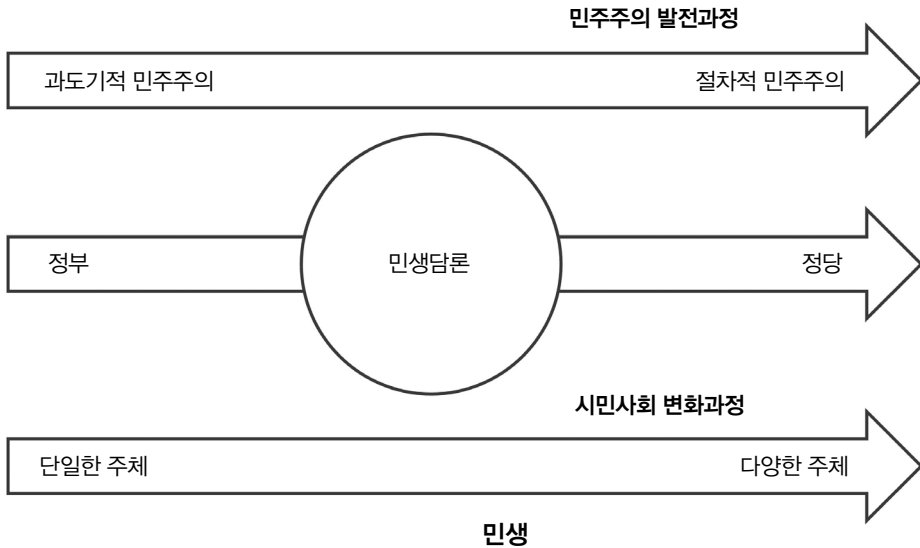
## ④ 민생 외면하는 국회 (중앙일보, 2000.07.28)

며칠 전 개각을 하고 대통령이 신신당부를 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지만 호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민의 수렴장으로서 국회가 나서야 하는 지금이다. 하지만 돌아가는 모양새는 그렇지 못하다. 임시국회 소집 나흘 만에 문을 닫고는 뒷전에서 영똥한 싸움질만 하고 있다. 여야 스스로가 내뱉은 대로 ‘개판 정치’ ‘저질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정당의 입장만 고집해서 당리당락에 의한 정쟁에 얽매이지 말고 초당적 대처로 민생을 우선하여 국회정상화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각종 민생현안을 상정하고 법제화 하는 노력은 곧 민생과 결부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 상실은 사회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민생담론 역시 국회·정당에 대한 문제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위의 사례들은 신문의 입장에서, 민생문제에 대한 정당의 책임과 기능이 담론 재생산의 추동력이자 비판의 소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노태우 정권에서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까지 민생문제의 중심은 바로 민생치안이었다. 그리고 치안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통제를 정부와 관계당국에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 이전의 정당은 왜 민생담론의 빈번한 소재가 되지 못했을까? 조현연(2006)에 의하면 한국의 정당체제는 이념 및 정책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인물이나 지역중심의 정당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미 상당 정도의 다원주의 사회로 발전한 한국의 정치경제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전근대적 정당체제였다는 것이다. 이전의 역대 정당들은 사회적 기반이 약하여 사회의 특정 계급이나 계층, 세력을 대표하지 못하였고, 또 강한 인물중심주의로 인하여 보스의 정치적 운명과 함께 정당의 생존이 좌우되었으며 이것이 정당의 정체성 결손과 정책 부재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국의 정당은 단지 국가 권력의 장악 여부를 둘러싸고 명목상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림 1. 신문사설에 나타난 정치영역에서의 민생담론 변화과정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는데, 수많은 거부점(veto point)의 존재로 민주정부는 과단성(decisiveness)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양제진, 2007). 특히 의정행위에 있어 의견과 갈등에 의한 스펙트럼(spectrum)과 위상차(phase difference)가 민주화의 발전만큼 넓고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정행위를 통해 발현되는 ‘이상적인 사회의 지향점’이 있다고 가정 한다면 이러한 중심으로의 회기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가 변하고, 민주주의가 진척되어도 민생담론은 여전히 ‘민생 없는’ 담론을 초연하게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생이란 명목으로, 정부에서 국회로 비판의 대상만 옮겨갔을 뿐, 오히려 혼란스런 민주화로 정착 민생은 배경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민생정치 담론의 변화는 첫째, 민주주의 발전과정의 변화에 따르며, 둘째, 비판의 대상이 정부에서 정당으로 변하고 있고, 셋째, 다양한 시민사회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2) 민생경제 담론

경제위기론은 경제상황의 곤란과 그러한 곤란을 초래한 경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구조개편에 따른 부담을 계층·계급별로 배분하는 대안으로 끝을

맺기 마련이다. 1989년에 들어 수출부진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위기론이 부상 하였고 전환 점인 1990년 전후로는 ‘노사분규로 중공업 등 중심산업 위기’ 라는 식의 총체적 난국설이 대대적으로 유포되었다(김상조, 2004). 수출부진으로 인한 경상수지의 적자는 환율을 오르게 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되므로 물가는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1990년대의 민생경제는 주로 물가와 통화증가율에 대한 내용이 잦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① 물가비상과 민생안정 (서울신문, 1990.04.03)

물가가 몹시 불안정하다. 국민생활안정의 전제가 되는 물가가 올들어 석달동안 3.2%나 상승하고 앞으로 전망도 불확실하여 심히 걱정이 된다. 1·4분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율로 환산하면 12.8%로 두자리 수에 있다. 물가상승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81년이래 10년만에 최대의 물가상승이 예상되기도 한다.

② 확고한 대책으로 민생 안정을/경제운용 더 표류하면 안된다 (한겨레신문, 1991.12.10)

그토록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던 총통화증가율이 지난달에 20%를 넘어, 연말 억제선이 사실상 무너지게 되었다. 중소기업에의 대출을 비롯한 정책금융과 추곡수매자금의 방출 등 재정부문의 지출이 급증하여 그러한 결과를 빚어냈지만, 이달에도 이와 같은 팽창기조는 그대로 지속될 듯하다. 이런 불안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무엇보다도 재정이 져야 한다.

③ 민생물가를 안정시켜라 (중앙일보, 1993.10.02)

9월중 물가가 이미 연말억제선에 육박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추석을 계기로 냉해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상승에 책임을 떠넘긴채로 두면 물가상승 추세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다 아직 복병으로 잠재해 있는 것이 통화공급의 확대로 인한 잠재유동성의 증가다. 실명제 후속조치로 풀린 돈이 제대로 금융권으로 환수되지 않을 경우 인플레이 압력은 내년까지 이어져 거시경제운용의 중요한 제약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물가와 민생, 경제 (국민일보, 1993.10.02)

먼저 대책을 세워야한다. 이제 큰소리나 자신감만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물가상승요인은 산적해 있다. 통화증발만 해도 그렇다. 돈이 너무 풀린다. 풀리지 않

을 수 없다. 경제회생작업과 실명제 정착의 과제가 이를 불가피하게 해주고 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타결, 그리고 이듬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성립했던 전후로 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7년의 IMF사태는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환란으로 기업의 잇따른 도산과 금융 불안이 이어졌고, IMF의 외압에 따른 정부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은 실업자를 무더기로 배출했다. 결국 무거운 짐을 진 것은 일반 국민의 몫이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라면 민생경제와 관련한 담론이 상당량 쏟아져 나왔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연구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IMF사태와 민생문제를 직접 연결하는' 담론의 사례는 그 수가 극히 적었다. 경제는 특히,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생문제로서는 매우 민감하게 대두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민생경제 담론은 독자적인 분석이나 견해보다는 정부의 발표를 기반으로 한 피드백(feedback) 수준에 머물렀으며, 의외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97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해당되는 아래 ①~③의 사례들을 보면 여전히 정치권의 문제나 치안문제, 공무원 비리 등을 문제 삼고 있었다.

① 임시국회 민생 위주로 (서울신문, 1997.12.22)

정치권의 인식부족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간 밥그릇 싸움으로 이월된 것이다. 이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처리가 불가피해진 만큼 이번 국회가 법안처리를 또 미루는 일이야 없겠지만 자칫 '졸속처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법안 심의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란다.

② 느는 범죄, 움추린 민생 (세계일보, 1998.01.05)

IMF(국제통화기금)한파로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각종 범죄사건이 빈발할 것으로 예고돼 왔는데도 정권말기의 치안당국은 강력범죄에 속수무책이다. 이번 새해 연휴동안 은행금고가 털리는 등 강도·절도사건이 10%나 늘어나 치안공백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전과5범의 무기수가 탈옥해 1년가까이 활개를 치며 경찰과 숨바꼭질하는 모습이 구명난 치안행정의 현실이다.

## ③ 민생분야 총체적 사정 (국민일보, 1998.10.14)

김대중 대통령이 부패일소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법무부는 민생관련 비리를 무기한 단속기로 했다. ... 극히 일부일지라도 대민업무 담당자들의 부패는 비리의 구조화를 초래한다. 전체공직사회를 오염시키고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면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데는 몇몇 공무원의 비리만으로도 부족하지 않다. 우리 경제가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도 부분적으로는 그 탓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원인은 첫째,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은 것에 대해 신문사들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없었다는 것, 둘째, 정보제공자로서 선구적인 전문분석의 부재, 셋째, 정치에 종속된 비판에만 치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민생안정을 늘 강조해 왔던 민생담론이, 정작 국민들이 먹고사는 경제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점은 아쉽다. 다음의 인용문은 당시 사회분위기와 언론기관의 보도태도를 잘 설명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과 IMF에서는 한국 경제 위기의 지배적 원인을 한국경제의 구조적 원인에 두고 있다. 과도한 정부의 규제, 재벌간의 과도한 상호지급보증, 낙후된 금융시스템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IMF구제 금융 지원 결정 이후 언론의 보도 태도는 경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보다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국민들의 과소비나 일부관료들의 무능력으로 치부해 버리는 보도들이 많았다. 또한 IMF 위기 극복을 위해 근검 절약이나 금모으기 등 고식적인 방법의 동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양 호도하기도 하였다. IMF구제 금융신청 직후 경제위기 원인 규명 과정에서 보인 편향적인 보도 태도는 김대중 정부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변화가 생기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재벌개혁이 과거 정권의 재벌 길들이기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외재적 요인으로 IMF의 구조개혁 입김이 거세지자 뉴스의 보도태도도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확산시키는 쪽으로 선회하게 된다. 한마디로 언론은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보도보다는 시기마다 상황에 편승한 보도 태도를 보여 왔다(노중일, 1999).

지구적인 신자유주의와 개방화 물결에 대비해, 정부는 그에 따른 합당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1990년대 경제담론의 중론으로 모아진다. 그런데 통화불안이나 물가상승을 비롯한 외환위기의 원인이 정부나 해당기관에만 있다고 단언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의 입김에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시장에 거대 독점자본을 직접 행사 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재벌이었다.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식 계열사로 산발적인 확장을 했던 일부 재벌이 도산하였고, 곧 이어 연쇄도산이 일어남으로써 나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김상조(2004)는 관치금융 구조가 지속되어 재벌의 독점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을 막을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영삼 정부를 이어받은 김대중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재벌개혁에 전례 없이 역량을 집중했다. 그러나 재벌의 개혁과 총수의 사법처리는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저항세력의 거센 반발과, 언론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재벌개혁은 중도하차 하고 말았다. 그동안 재무구조, 사업구조, 지배구조 면에서 부분적 개선이 없지는 않았으나 재벌체제가 선진적이고 사회적인 기업체제로 환골탈태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노중일, 1999; 김기원, 2003; 정권화, 2007; 국민호, 2011).

민생담론 측면에서 재벌개혁에 동참하고자 하는 신문사의 의지는 소극적이었다. 또 정부·정치권 및 정치색을 띠는 시민단체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경제를 지배하는 재벌들에 대한 비판은 제외되었다. 심지어 “재벌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민족적 자긍심의 상징(정권화, 2007, p.231)”으로 대접받았다. 민생담론에서 ‘재벌’이란 단어도 1998년 이후 ‘대기업’이라는 명칭으로 순화되었다. ‘재벌’이라는 의미가 내포하는 문어발식경영, 가족경영이라는 좋지 않은 선입견을 의도적으로 탈색시킨 것이다. 동일한 대상을 두고 신문의 관점이 바뀌면 담론의 텍스트도 변화한다. 즉, 분배를 위한 개혁의 대상은 재벌이고, 성장을 위한 탈규제의 대상은 대기업이라는 것이다.

1990년대 민생담론의 경제적인 관점이 노동쟁의, 물가, 통화증가율, 주택문제, 외환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환란 이후인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 문제에 따른 거시적 구도에서부터 양극화 문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등의 문제들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의 민생경제 담론은 외환위기 때보다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담론의 논조들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분배우선에 치우쳐 있다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경제성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피력하고 있었다.

① 민생의 근본은 역시 경제다 (조선일보, 2003.03.03)

새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해있는 위기국면의 심각성을 가감(加減)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해결에 나서야 한다. 민생의 근본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에 있다. 개혁이나 분배도 경제가 흔들림없이 성장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 더욱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외부요인만이 아니다. 기업개혁과 분배·노동정책 같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불안감, 가계(家計)신용 대란 가능성 등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

② 규제 안 푸는 정부는 민생경제의 敵이다 (동아일보, 2006.08.16)

현 정부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계속 밀돈다. 더구나 경기가 다시 하강국면이다. 이런 저성장과 불경기에 따르는 고통은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된다.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빈부격차 축소를 위해선 규제 완화와 친(親)기업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각종 행정규제가 매년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깎아먹는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 성장률이 0.5%포인트 높아지면 일자리는 4만5000개 늘어난다.

③ 경제-민생을 여전히 따로 보는 대통령 (한국일보, 2006.09.02)

보다 큰 문제는 투자 활성화 등 성장을 위한 액션 플랜은 볼 수 없고 ‘복지가 곧 투자’라는 분배론적 관념과 효과가 의심되는 시혜적 처방만 넘쳐난다는 점이다. 지표의 건강성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참여정부의 GDP 성장률이 왜 잠재성장률을 훨씬 밀도는 4%선 안팎에 머물러 있는지부터 먼저 답변해야 한다.

④ ‘與野 민생경제회담’ 열어야 (조선일보, 2007.01.29)

노 대통령과 강 대표 간의 민생경제회담은 열리는 것이 좋다. 강 대표가 회담을 제안하면서 밝힌 일자리 창출, 집값 잡기, 교육부담 줄이기 등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논의해야 마땅할 의제들이다.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한·미 FTA도 時限시한이 코앞에 닥쳤다. 진작에 與野여야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 큰 물줄기를 잡고 국민 설득에 나섰어야 했다.

⑤ 민생 제쳐놓고 경제 살릴 수 있나 (세계일보, 2004.02.25)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져 절대빈곤층이 불어나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가 잘못돼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수십배씩 치솟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 분배는 거론할 필요도 없다. 호황산업과 불황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업종별로, 기업별로, 직종별로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경기불황의 여파로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여성을 비롯해 서민들이 주로 일자리를 잃는 바람에 빈부격차와 계층간 불평등은 환란 때보다 커졌다.

우리사회는 외환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로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했고, 그에 따라 생업을 위한 자영업자의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상권(Local Market Area)마저 재벌에 눌러 버렸다.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실정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했고, 양극화로 인한 분배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조형제 외(2007)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 성장모델의 성격이 크게 변하면서 사회정책도 변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했다. 특히, 성장을 통한 분배의 개선이라는 성장공유(shared growth)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성장과 분배 고리가 단절되고, 생산-고용-교육-복지 간의 연계성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글로벌화와 기술 변화,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글로벌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 간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었고, 이로써 성장의 분배 효과(trickle-down effects)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위의 ①~⑤까지의 사례들은 서로의 입장차가 있는 담론이라도, 핵심적인 키워드는 경제성장과 분배이다. 보수 언론의 민생담론들은 분배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가 그러하듯이, 민생담론에도 성장과 분배는 서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즉, 경제성장에는 탈규제로 인한 감세, 분배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증가라는 불가피한 조건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을 담론들의 텍스트 구조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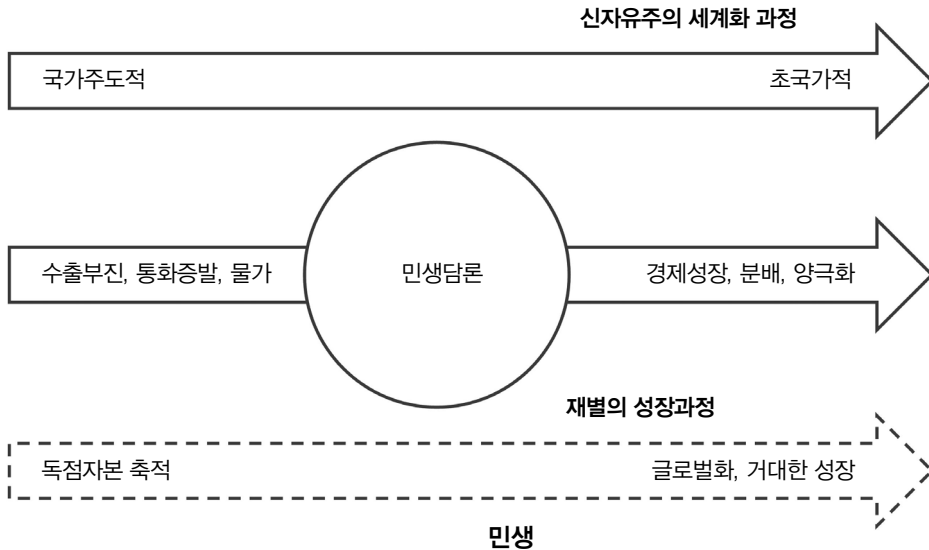
우리사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생경제 담론은 민생의 입장을 표방하며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비판을 가했지만, 위기를 벗어나려는 대안의 모색이나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주로 정부의 정책이나 대통령과 정치인의 언행에서 반사되는 피드백에 머무르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신문사의 확고한 정체성에 입각한 독립적인 대안이 결여된 비판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12월 19일, 연7%의 경제성장, 일인당 소득 4만불, 7대강국 달성이라는 이른바 747공약을 내세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⑥ 민생경제 회복에 전념을 이명박 당선자에게 바란다 (세계일보, 2007.12.20)

국민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차기 정부의 절체절명의 과제로 선택했다.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당선자로 선택하면서 던진 메시지이다. 민선 대통령 선거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당선자의 높은 득표율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특히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절반 정도가 이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은 예사롭지가 않다. 이 당선자가 선거에서 내세운 '경제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절절하게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이 당선자가 추진할 각종



그림 2. 신문사설에 나타난 경제영역에서의 민생담론 변화과정



정책에 그만큼 무게가 실릴 것이며 국정 운용도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의 사례는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경제대통령’을 탄생시켰다고 한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노무현 정부가 분배우선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어 비판했던 민생담론의 재생산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담론의 주도적인 흐름에 내면화된 국민의 기억자원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도대체 이명박 정부 이후 민생이 변한 것이 무엇인지 반문하거나 실감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상의 민생경제 담론의 변화과정을 정리해서 <그림 2>로 나타내었다.

#### 4. 결론

지난 25년여 동안 한국 신문 사설에 나타난 민생담론들의 주된 논지는 민생을 준거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논조는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게다가 신문의 민생담론은 민생을 대변한다는 암묵적인 전제하에 정부·정치권 또는 저항세력에 대한 적대적이나 공격적인 진술을 정당화 했다. 그렇지만 신문이 생산했던 민생담

론에서의 ‘민생’은 사전적 정의로서의 ‘국민 생활’이라기보다 주로 정치의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경제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실질적인 민생 문제는 빈곤, 분배, 노동, 교육, 생활개선 등이건만 신문의 민생담론에서 이들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민생담론은 곧 ‘민생치안’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기의 민생담론은 많은 치안문제 중에서도 ‘범죄’에만 편중되어 재생산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것은 담론과 사회의 상호작용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발견이다. 변화의 동인은 1997년 외환위기에 있었다. 이후 민생담론은 두 가지 큰 줄기로 갈라졌다. 비판대상의 변화와 경제적인 변화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한 요구 담론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후반까지 치안사건에 대한 정부와 정책의 불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김대중 정부 들어서부터는 국회와 정당의 의정행위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국민은 국회와 정당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드러내는 민생담론에 상당시간 노출 되어 왔다. 이런 관행들은 정치에 대한 무조건적 혐오와 무관심, 나아가서 냉소주의, 탈정치, 반정치 현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1990년대 민생담론들이 노동쟁의, 물가, 통화증가율, 주택문제 등을 다루었다면 환란이후인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문제부터 양극화 문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등의 문제들을 부각시켰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민생담론들은 공통적으로 성장과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분배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더 두고 있었다. 또 경제위기 상황에서 신문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비판을 가했지만, 위기를 벗어나려는 대안을 모색하거나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신문은 재벌개혁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도 소극적이었다. 정부·정치권과 정치색을 띠는 시민단체는 비판의 대상이었지만 경제를 지배하는 재벌들에 대한 비판은 배제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신문 사설에서의 민생담론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주체지위를 정했다. 결국 권력관계가 재생산 된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신문과 정치는 같은 패도에 있다. 적어도 신문의 민생담론은 권위적 혹은 보수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언론은 민생담론을 통해 노동, 노인, 빈곤, 여성문제 등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지칭하는 ‘민생’은 허상일지도 모른다.

본 논문의 문제점은 페어클러프 분석틀의 한계, 이 틀에 대한 부족한 이해, 지면의 한계 등이 같이 작용한다. 페어클러프의 위계적 분석틀은 텍스트와 담론, 사회적 관계의 층

위를 구별하고,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 그리고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담론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의 경계를 위계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페어클러프조차 자신의 중심이론 토대 안에서 특정 부분만 강조하기도 했다(Fairclough, 1995/2004, p. 90). 위계적인 모델의 비정교함과 변증법적인 상호관계의 모호성·비대칭성은 좀 더 체계적인 모델이나 분석지표로 정교화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기의 논의가 부족했고, 주체와 정체성 부분도 아쉬움이 남는다. 이 모든 것은 추후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최근 신문에 관한 연구들은 그들의 정파성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다른 점을 밝혀내고자 했다. 그러나 정작 언론이 생산하는 담론과 사회적 역할을 살펴보는 경우는 소홀한 것 같다. 연구자들은 역사적인 추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의심 없이 만연되고 있는 ‘민생담론’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현재가 왜 이 모양인가를 파헤치기 위해 과거의 역사를 탐색하는 것이다.”라고 한 푸코(1971/2003)의 지적은 언제나 귀감이 된다.

## 참고문헌

- 고경민·송효진 (2010). 인터넷 항의와 정치참여, 그리고 민주적 함의: 2008년 촛불시위 사례. 『민주주의와 인권』, 10권 3호.
- 국민호 (2011). 국가주도에서 기업주도로: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와 재벌과의 관계 변화. 『현상과 인식』, 통권 114호, 129~158.
- 권순택 (1990). 특집2: 범죄보도, 언론사마다 특색 있는 편집방침 정해야. 『신문과 방송』, 5월호, 52~55.
- 김교상·노혜진 (2011). 『한국의 빈곤: 다차원적 접근과 재생산 메커니즘』. 나눔의 집
- 김기원 (2003). 재벌체제의 발전과 모순.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역사와 위기』, 1장(45~75). 함께 읽는 책.
- 김상조 (2004). 재벌문제의 현실과 인식: 1980~90년대 대내외적 자유화정책의 의미와 결과.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4장(135~165). 함께 읽는 책.
- 김서중 (2003). 언론산업화 정책의 변천과 지배 담론, 그리고 대안 담론에 대한 고찰.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 175~204. 함께 읽는 책.
- 김석영 (2012). 『주체의 탈중심화에 기초한 현대 공간디자인의 사건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김성재·김상철 (2010). 『야만의 언론, 노무현의 선택: 조폭언론에 맞선 노무현 5년의 투쟁기록』. 책으로 보는 세상.

- 김슬옹 (2009). 『담론학과 언어 분석-맥락-담론-의미』. 한국학술정보(주).
- 김영명 (2006). 『한국의 정치변동』. 을유문화사.
- 김용진 (1999). 한국과 미국의 신문사설 텍스트 비교: ‘근거성’ 표현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7권 1호, 119~149.
- 김용진 (2003). 신문 사설 제목의 사회언어학적 분석. 『사회언어학』, 11권 1호, 31~54.
- 김일영 (2009). 노태우 정부에서의 정치사회적 갈등양상과 해결경험. 『분쟁해결연구』, 5~25.
- 김재한 (2012). 『대한민국 국회, 불신과 양극화』. 한림대학교 출판부.
- 김정훈 (2006). 민주화 세계화 ‘이후’ 생활세계의 변화와 시민참여적 대안 -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민주화 세계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체제 모형을 찾아서』, 8장(321~348). 함께 읽는 책.
- 김종영 (2011). 대항지식의 구성: 미 쇄고기 수입반대 촛불운동에서의 전문가들의 혼성적 연대와 대항논리의 형성. 『한국사회학』, 45권 1호, 109~153.
- 김혜영·강범모 (2011). 신문사설의 어휘적 특징: 2009년 신문 코퍼스에 기초한 키워드 연구. 『담화와 인지』, 18권 3호, 89~113.
- 김효진 (2008).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의 사설 비교 연구: 20년간 사설의 의제와 프레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노중일 (1999). 『경제위기 관련 방송뉴스 보도 태도 분석: MBC 뉴스데스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류동민 (2007). 진보적 경제대안에 나타난 민생의 문제. 『기억과 전망』, 16호, 8~37.
- 박용찬 (2004). 『2004년 신어』. 국립국어원.
- 박종성 (2006).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주)살림출판사.
- 박해광 (2007). 문화 연구와 담론 분석. 『문화와 사회』, 2권, 83~116.
- 서관모·백승욱 편역 (2012). 『철학적 맑스주의』. 새길 아카데미.
- 송재소·이봉규·김태영·안병직·조성을(2012). 『다산 정약용 연구』. 사람의 무늬.
- 신진욱 (2011).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 사회』, 89호, 10~45.
- 심광현 (1992). 언어 비판과 철학의 새로운 실천- 비트겐슈타인과 알튀세르. 『문화과학』, 2호(겨울), 47~83.
- 양운덕 (2003). 『미셸푸코』. 살림.
- 양제진 (2007). 유능한 민주정부의 창출을 위한 제도개혁과제. 『한반도 경제론: 새로운 발전모형을 찾아서』, 1부, 국가발전모델(66~84). 창비.
- 엄정식 편역 (1983). 『비트겐슈타인과 분석철학』. 서광사.
- 우중철·노희상 (2013). 『박근혜 민생정부 약속과 책임: 민생-대통합 개혁의 아젠다』. 도서출판 승연사.
- 윤평중 (2006). 『논쟁과 담론』. 생각의 나무.
- 이기형 (2006).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가을 14권 3호, 106~145.

- 이성만 (2005). 페어클러프(N. Fairclough)의 비판적 담화분석: 언어학적 텍스트분석의 또 다른 대안인가? 『독일어문학』, 28집, 389~409.
- 이재경 (2003). 『한국 저널리즘 관행 연구』. 나남출판.
- 이종영 (2003). 정치적 프락시시로서의 담론투쟁.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 19~74. 함께 읽는 책.
- 이창수 (2013). 국내 신문기사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관한 비평담화분석연구. 『언어와 언어학』, 58집, 313~344.
- 이천현·김지영·임정호 (2008). 민생경제침해범죄의 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3~452.
- 장현근 (2009). 민(民)의 어원과 의미에 대한 고찰. 『정치사상연구』, 15권 1호, 131~157.
- 정권화 (2007). 재벌개혁과 한국경제. 『한반도 경제론: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아서』, 4부 산업, 기업, 금융(230~248). 창비.
- 정미정·백선기 (2011). 한국신문의 영화에 관한 보도담론의 특징과 의미: 산업담론과 문화담론의 대립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3호, 28~272.
- 정재철 (2002). 한국언론과 이념 담론. 『한국언론학보』, 46권 4호, 314~348.
- 조기숙·박혜원 (2008). 광장의 정치와 문화적 충돌: 2008촛불집회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2권 4호, 243~268.
- 조현연 (2006). 민주화 세계화 ‘이후’ 대안정당정치 모형연구. 『민주화 세계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체제 모형을 찾아서』, 3장(125~159). 함께 읽는 책.
- 조형제 (2007). 신진보주의 발전모델의 모색. 『한반도 경제론: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아서』, 1부, 국가발전모델(24~47). 창비.
- 조희연 (2006). 대안담론과 ‘생태평화 사회민주주의’. 『민주화 세계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체제 모형을 찾아서』, 서장(1~31). 함께 읽는 책.
- 최선열·김학수 (2002). 국회보도의 부정주의 연구. 『의정연구』, 8권 1호, 160~197.
- 홍성태 (2008).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경제와 사회』, 겨울호(80), 10~39.
- Althusser, L. (1994). *Sur La Philosophie*. Editions Gallimard. 서관모·백승욱 역(1997). 『철학에 대하여』. 동문선.
- Althusser, L. (1971).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In Lenin and Philosophy*. New Left Books.
- Barker, C. & Galasinski, D. (2001). *Cultural studies and discourse analysis: A dialogue on language and identity*. Sage Publications Ltd. 백선기 역(2001).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대화』. 커뮤니케이션 북스.
- Bell, A. & Garrett, P. (1998).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Blackwell Publishers Ltd. 백선기 역(2004). 『미디어 담론』. 커뮤니케이션 북스.
- Bourdieu, P. (1992). *Language and symbolic power*. Polity Press.
- Chambers, R. & G. R. Conway. (1991). *Sustainable Rural Livelihoods: Practical Concepts for the 21st Century*.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DP.
- Chambers, R. (1995). *Rural Development: Putting the Last First*. Prentice Hall.

- Chambers, R. (1997). *Whose Reality Counts?: Putting the First Last* pbk. Intermediate Technology Development Group Pub.
- Choi, Jang Jip (1993). Political Cleavages in South Korea. Hagen Koo(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Dalton, Russell Jr. (2000). Citizen Attitudes and Political Behavior.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3(6/7), 912~940.
- Fairclough, 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Polity Press.
- Fairclough, N. (1995).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gman.
- Fairclough, N. (1995). *Media Discourse*. Edward Arnold. 이원표 역(2004).『대중매체 담 화분석』, 한국문화사.
- Fairclough, N. (2003). *Analysing Discourse*. Taylor & Francis Group. 김지홍 역(2012).『담화분석방법 : 사회조사연구를 위한 텍스트분석』. 도서출판 경진.
- Fairclough, N. (2011). *Language and Power 2nd*. Pearson Education Limited. 김지홍 역(2011).『언어와 권력』. 도서출판 경진.
- Fairclough, N. & Wodak, R. (1997).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T. van Dijk(ed.). *Discourse as social interaction*. Sage.
- Foucault, M. (1969). *L'archéologie du savoir*. Gallimard. 이정우 역(1992).『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 Foucault, M. (1971). (*L'ordre du discours*. Gallimard. 이정우 역(2011).『담론의 질서』. 새길.
- Foucault, M. (1971). *Histoire dela folie a l'age classique*. Gallimard. 이규현 역(2003)『광기의 역사』. 나남출판.
- Hastings, Annette (1998). Connecting Linguistic Structures and Social Practices: A Discursive Approach to Social Policy Analysis. *Journal of Social Policy*. 27(2), 191-211.
- Laclau, E. & Mouffe, C. (2001).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Verso. 이승원 역(2012).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급진 민주주의의 정치를 향하여』. 후마니타스.
- Rakodi, C. & Lloyd-Jones, T. (2002). *Urban Livelihoods: A People-Centred Approach to Reducing Poverty*. Earthscan Publications.
- Sarup, M. (1993). *An Introductory Guide to Post-Structuralism and Postmodernism*. Prentic Hall: UK. 전영백 역(2005).『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서울하우스.
- van Dijk, Teun A. (1988). *News analysis: Case studies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news in the press*. London: Lawrence Erlbaum.
- van Dijk, Teun A.(ed.). (2007). *Discourse Studies* (Vol.1). Sage Pub..

범죄와의 전쟁,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52512](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52512)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main.html>

한국언론진흥재단(KINDS) 기사통합검색 <http://www.mediagaon.or.kr>

투고일자: 2014. 05. 31, 수정일자: 2014. 07. 20, 게재확정일자: 2014. 07. 25

# Critical Approach to the Discourse of Livelihood in Korean Newspaper's Editorial

**JungMin Lee**

Student in Doctoral Course, Dept. of Mass Communi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angKhee Le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clarify (1) the meaning of 'people's livelihood (*Minsaeng*, 民生)' conveyed by the newspapers in Korean society and the specific matter it refers to, and (2) consider the discourse formed by the newspapers and what does and does not change in that discourse over the passage of time. Editorial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based on the framework of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CDA). It was clear, from the political perspective, that the discourse was respectively formed and changed for each administration. The discourse on 'people's livelihood' was critical and at the same time generally negative, because it dealt with the important social incidents or controversies of the time. The discourse on 'people's livelihood' related to the massive social streams of Korea's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process. Whereas the discourse on 'people's livelihood' in the 1990s, seen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ried to resolve labor strikes, inflation rate, housing problem, and financial crisis. The discourse in the 2000s changed to issues ranging from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to bi-polarization problem, job creation, abolishment of non-regular employments, etc. The meaning of 'people's livelihood' produced in the editorials of the major daily newspapers is different from the word's dictionary definition as 'the people's lives'.

**KEYWORDS** livelihood, discourse, CDA(critical discourse analysis), power relation, constraints of subject/relation, context